

도, 현대차 9조 투자 지원체계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가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 원대 투자협약 이행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전북자치도는 2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현대자동차 투자 지원단' 중심의 유관부서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투자 이행을 위한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과

유관부서 협력회의 개최... 투자 이행 위한 실행체계 점검 5월 범정부 종합지원계획 수립, 전방위적 협업체계 본격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현대차 투자 지원단을 중심으로 도 차원의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는 첫 협력회의로, 아차전지·

수소·디지털 산업 등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해 분야별 지원 방안과 협업 체계를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11일 국무총리 주재 '새만금·전북 대혁신 TF'에서 도출된 과제 가운데 전북도가 담당하는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실행 계획을 점검했다. 주요 과제는 산업 연구개발 지원, 인력양성, 투자부처 공급, 정주여건 개선, 교통 인프라 확충 등으로, 현대차 투자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실질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전북도는 앞으로 투자 지원단을 중심으로 주간 점검회의를 운영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중앙부처 및 새만금개발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1개월 이내 투자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개월 이내 범정부 대책과 연계한 '현대차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해 투자 실행 기반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현대차 투자 지원단은 대규모 투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핵심 실행기구"라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현대자동차 투자 지원단' 중심의 유관부서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투자 이행을 위한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자치도, 1분기 소비·투자 집행 총력

도·시군 합동 점검회의서... 집행 실적 점검·대응방안 논의

1조 5058억 규모 소비·투자 집행... 지역경제 선순환 유도

전북특별자치도가 경기 둔화 속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공공부문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지난 20일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2026년 1분기 소비·투자 집행 제고 대책회의'를 열고 14개 시군 부단체장과 함께 집행 실적과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공공부문의 소비·투자 집행을 최대한 앞당겨 재정이 지역경제에 신속히 순환되도록 하고 민생경제 회복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에 따르면 1분기 소비·투자 분야 집행 목표는 총 1조5,058억원으로, 3월 중순까지 약 9,213억원을 집행하며 신

속 집행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매주 점검회의를 통해 집행 상황을 관리하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시설비를 중심으로 집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선급 및 기성급 조기 지급, 신속집행 지침 활용 등을 통해 집행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1분기 집행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는 총 5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비 미교부과 행정절차 지연 등 현장 애로사항도 함께 논의됐다. 도는 집행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만호 기자

어양로커피푸드 영업 지속한 조합에 '강력 대응'

익산시, 카페·베이커리 등 5개 시설 영업신고 직권철회 단행

익산시가 위수탁 계약 종료 후에도 익산로커피푸드조합 어양점을 무단으로 점유·운영해온 협동조합에 대해 영업신고 직권철회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착수했다. 이는 시민의 자신인 공공시설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투명한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결단이다.

시는 지난 2월 28일자로 수탁 계약이 끝나 사용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도 익산로커피푸드조합 어양점 영업을 지속한 협동조합에 대해 23일부로 매장 내 주요시설의 영업신고를 직권 철회했다.

이번 조치로 직매장은 물론 매장 내 베이커리, 반찬 가게, 카페, 밀키트 제조시설 등 모두 5개 시설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밖에 시는 정육 코너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거쳐 영업권 관련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각 영업 주체가 이러한 조치에

도 불구하고 무허가 영업을 강행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에 따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해당 법을 어기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시는 자진 폐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자진 폐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폐쇄명령을 내리고 '시설물 봉인' 등 강제 폐쇄 조치를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정조치는 단순히 영업을 중단시키는 것을 넘어, 그간 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일부 회계 처리의 불투명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 직매장 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실제 향후 익산로커피푸드조합 모현점과 같이 영세 농가 수수료 감면 등 실질적 혜택이 농민과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준 기자

전북도, AI 미생물 정밀발효 산업 육성 위해 '글로벌 협력'

국내외 7개 기관과 MOU 체결... 도내 미생물 자원 기반한 AI 기술 융합 플랫폼 조성 등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전북연구개발특구의 미생물 자원과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외 7개 기관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를 비롯해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싱가포르 첨단연구소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를 통해 전북을 중심으로 AI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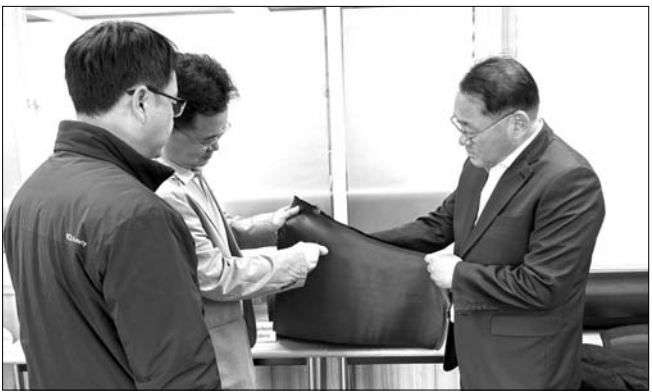
정밀발효 산업의 글로벌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참여 기관들은 전북 지역의 풍부한 미생물 자원과 AI 기술을 융합해 데이터 수집부터 설계, 실증, 제품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동 연구와 사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AI 기반 미생물 정밀발효 기술 상용화 전문 인력 교류, 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

고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북 지역 첨단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력은 전북의 미생물 자원 인프라를 기반으로 추진된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립농업과학원,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등에서 보유한 약 20만 종의 미생물 데이터를 연계해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공모사업에도 공동 대응할 계획

이다. 또한 생형용 유전체학 기술을 활용해 AI가 최적의 유전자 조합과 대사 경로를 설계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미생물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연구도 추진된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전북 바이오 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AI 기반 정밀발효 산업화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도, 첨단복합소재 기반 방산산업 육성 현장행정 강화

김종훈 경제부지사, 방산소재 기업 현장 방문·애로사항 점검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23일 김제시에 위치한 방산소재 기업 ㈜디솔을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23일 김제시에 위치한 방산소재 기업 ㈜디솔을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과 연계한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디솔은 특수 탄소소재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고체추진로켓 부품용 내열소재 등 방산 적용 가능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유해물질 필터용

황산탄소소염류 등 관련 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개발된 소재를 실제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단계 시험과 인증 절차가 필요하고 무기 제조 엔지니어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됐다. 이에 도는 2026년 방위사업청 주관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도내 방산소재 기업과 엔지니어 간 연계를 지원하고, 핵심부품 시험·평가 및 인증 지원을 강화해 국내외 판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방산소재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지역 주력산업과 방위산업을 연계해 2030년까지 합정, MRX, 국방첨단 등 4~5개의 방산핵심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지역 특화 산업 분야를 집적화·육성할 계획이다.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사업은 방산 특화 연구·시험·실증 기반 구축과 국방 신산업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중소·벤처 기업들을 지원하여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도는 탄소소재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첨단복합소재 중심의 방산 밸류체인을 구축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연구·시험·실증이 가능한 기반과 기업 집적화를 토대로 방산소재 산업의 성장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이다. 향후 복합소재 공급망 내재화를 목표로 소재 개발부터 시험·인증, 조달까지 연계되는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오만호 기자

생활밀착형 정책 수립

사회권 정책 마켓 개최

혁신당, 전주서 의견 수렴

조국혁신당이 전주에서 시민 참여형 정책 발굴 행사인 '사회권 정책 마켓'을 개최하며 생활 밀착형 정책 수립에 나섰다.

조국혁신당 사회권선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민)는 지난 22일 전북 전주 남부시장 모이장에서 '사회권 정책 마켓-경청과 배달' 전북지점 행사를 열고 시민 의견을 직접 수렴했다.

이번 행사는 책상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에 앞서 참석자들은 최근 발생한 대전 대덕 공장 화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소방관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9개 쟁점으로 원탁 토론을 진행한 뒤 각 쟁점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의료·돌봄, 이동권, 주거·문화 등 일상과 밀접한 사회권 의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의료·돌봄 분야에서는 방문 재활치료 확대와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개발이 제시됐고, 교통·이동권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 의무화와 장애인 이동 서비스 요금 격차 해소, 농촌 버스 노선 개선 등의 요구가 이어졌다. 주거·문화 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지역 랜드마크 조성 등 문화 향유권 보장이 주요 과제로 제안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자립 추모 공원' 유가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유가족들은 추모공원의 소유권 문제로 방문이 제한되고 유골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현실을 호소하며, "고인을 존엄하게 추모할 권리 역시 국가가 보장해야 할 사회권"이라고 강조했다. /오만호 기자

"익산의 새 희망 여는 출발점"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익산의 변화를 내건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세 확장과 민생 행보에 나섰다.

대규모 시민 참여 속에 진행된 이번 개소식은 단순한 선거 준비를 넘어 '익산 대전환의 출발'을 일컫는 상징적 자리로 평가된다.

조 예비후보는 이날 개소식을 통해 "익산의 새로운 희망을 여는 출발점"이라며 시민 중심 정치의 시작을 선언했다. 행사에는 약 5,000여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선거사무소 안팎을 가득 메웠으며, 인근 지역까지 인파가 이어지는 등 지역사회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번 개소식은 시민과의 소통을 전면에 내세운 점에서도 눈길을 끌었다. 조 예비후보는 행사 내내 시민들과 직접 인사를 나누며 현장 중심



행보를 이어갔고, 선거사무소 역시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화환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하며 과시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선거 문화를 강조했다. 조용식 예비후보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민생 행보를 이어가며 시민 체감형 정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만호 기자·익산=이재준 기자

햇빛선대위 구성... 정책 선거 선언

김진명 입실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 선대위 출범

김진명 입실군수 예비후보가 '햇빛선대위'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22일 입실군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선거사무소에 '햇빛선대위'를 구성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운동을 선언했다.

그는 "혁신선진과 경쟁 후보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네거티브 선거를 배격하고 권위를 위한 공약 대결로 승부하겠다"며 클린선거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예비후보는 농업 기반 지역 특성을 고려해 농민 소득 안정과 미래 농업 전환을 핵심 축으로 내세웠다. '햇빛선대위'는 정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약제안 입실군민 플랫폼'을 운영한다. 해당 플랫폼은 선거사무소를 상시 개방해 군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SNS를 통한 온라인 참여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원모 선대위 본부장은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지적되는 민원 행정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오만호 기자·입실=진홍영 기자



도내 구축 생성형 AI, 3개월 만에 10만 건 돌파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체 구축해 운영 중인 생성형 AI 시스템의 누적 사용량이 정식 운영 개시 3개월 만에 10만 건을 돌파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생성형 AI 시스템은 지난 2025년 12월 22일 운영을 시작해, 이달 22일 기준 누적 질문 건수 10만7,000건, 총 사용자

3,873명, 전체 사용률 68%를 기록했다. 특히 분청 사용률은 90%에 달해, 공공 행정 전반에 걸친 AI 활용이 빠르게 일상 업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그간 모바일 앱 정식 출시, 시스템 처리 속도 개선, PDF·HWP 문서 추출 기능 고도화 등 편의성과 업

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신규 앱 '전북AI'를 전 직원에게 보급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AI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구현하고 있다. /오만호 기자